

보도해명자료 (18.9.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신한울 3·4호기 손배소송 임박...매물비용 눈덩이”,
“숨은 매물비용 조단위...부실 정책이 부추긴 사회적 갈등”,
“원전협력 기업들 쓰러지는데 사업전환 지원은
그림의 떡” (18.9.11, 문화)

1. 기사내용

- ① 신한울 3·4호기의 건설 백지화 여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옴
- ② 신한울 3·4호기 매물비용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
- ③ 에너지전환펀드 조성은 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, 기활법 역시 적용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음
- ④ 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·중견기업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및 한수원 입장

- ① 신한울 3·4호기 건설계획 취소는 ‘에너지전환로드맵(17.10.24)’, ‘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(17.12.29)’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바 있으며, 이러한 정부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

- 1 -



- 지난 6.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시 신한울 3·4호기가 제외된 것은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들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협의하는데,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임
- ② 또한, 신한울 3·4호기 관련 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음
- 관련 비용은 한수원이 계약당사자들과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확정된 이후 정부에 신청하면, 비용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확한 규모가 확정될 예정임
- ③ 또한, 산업부가 지난 6.21일 발표한 ‘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 대책’의 ‘원전 중소기업 지원’ 정책 중 기사에서 언급한 ‘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지원’, ‘기활법 활용 지원’, ‘에너지전환펀드(500억원)’ 등과 관련,
 - ‘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지원’, ‘기활법 활용 지원’ 등은 현재 한수원, 원자력산업회의 등과 함께 지원 대상 등에 대해 파악 중인 단계임에 따라, 동 기사에서 언급한 ‘기활법 역시 적용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다’는 것은 사실과 다름
 - 에너지전환펀드(500억원)도 금융기관 등과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, 조만간 확정할 계획
- ④ ‘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·중견기업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’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- 현재까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파악한 바로는 한수원 협력업체(약 620여개사) 및 원자력산업회의 등록업체(115개사)중에서 도산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없음
- 향후 한수원과 관련 업체는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서 원자력 산업계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

- 2 -

※ 관련 문의 : 원전산업정책과

정종영 과 장(044-203-5320)

홍충완 사무관(044-203-5322)

한국수력원자력(주) 기획팀
언론홍보팀

윤승호 팀 장(054-704-4110)

이은홍 팀 장(054-704-1440)